오리 소비 늘리려면… 가치 바로알리고…요리개발 나서야

오리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확대와 다양한 요리 개발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견을 하루빨리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6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산 오리고기 대중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소비자 및 영양사 인식은=허경옥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서울 · 경기지역 소비자 500명의 오리고기 구입 동기를 조사한 결과 '건강식으로 구입한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진열품을 보고(14%) ▲추천(7%) 순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오리고기 메뉴는 ▲구이(38%) ▲훈제(32%) ▲주물럭(15%) 순이었다.

서울 · 경기지역 초 · 중 · 고교 영양사 500명에게 물은 결과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는 국내산 육류 가운데 오리고기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반면 영양사들은 오리고기의 맛에 대해 '맛있다(47%)' '보통이다(42%)'로 응답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비 확대방안은=전문가들은 오리고기의 우수한 맛과 영양을 적극 알리면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이우진 주원산오리 대표(한국오리협회 감사)는 "소비자들이 오리는 여름철에만 먹는다, 냄새가 난다 등의 오해를 갖고 있다"면서 "오리고기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주 건국대 교수는 "다양한 오리고기 요리를 개발하고, 오리농장 체험행사와 시식회를 열어 소비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화 원장은 "다른 축산물에 비해 미약한 오리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2012.05.29

농림수산식품부, 고병원성 AI 방역체계 평시로 전환

(서울=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는 철새 이동 시기에 맞춰 지난해 10월1일부터 운영해온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이번 달 말에 끝남에 따라 6월 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지난 5월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총 8개월간의 AI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장비, 통제시설, 안내판, 발판소독조 등 실태조사 실시 후, 관련 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중앙기동점검반을 통해 점검했다.

또 국내 유입 여부 조기 검색과 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가금류 사육농장, 철새도래지 및 유통경로별 예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대상 7종 총 시료 30만 7천건을 검사해 바이러스 검출지역에 대해서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반경 10km이내 농가 이동제한 등 조치했다.

이밖에 AI 발생을 대비해 AI가상훈련(CPX)를 작년 12월 실시,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및 실무매뉴얼과 행동매뉴얼을 올해 4월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AI관련해 특별한 동향이 없어 현행 주의 단계인 위기 경보도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하되, 해외여행객 등 국경검역, 야생조류 등 모니터링 검사, 집중관리지역 방역 지속 및 상시 비상연락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고병원성 AI는 총 4차례 발생했고 역학조사 결과 야생철새의 국내유입이 원인이고 국내 AI 발생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며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중국 · 베트남 등지에서 AI를 통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사육환경이 완전히 다르므로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pressdot@newsway.kr 2012.05.29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내용 100% 자원화 가능한 가축분뇨, 폐수로 보는 시각부터 고쳐야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분노하고 있다. 식량산업인 축산 말살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지난달 25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농협과 축단협이 공동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사진〉에는 500여명의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장, 일선축협 조합장이 참석해 이번 개정안은 축산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지정토론자〉
– 좌장 노경상 원장(축산경제연구원)
– 이종광 사무관(농식품부 방역관리과)
– 권우순 사무관(농식품부 축산정책과)
– 어성욱 교수(우송대)
– 김용석 과장(국립환경과학원)
– 김영자 부회장(한우협회)
– 이승호 회장(낙농육우협회)
– 이병모 회장(한돈협회)
– 이준동 회장(양계협회)
– **정정우 부회장(오리협회)**
– 이철호 조합장(파주연천축협)
– 이제만 조합장(대충양돈조합) 〈이상무순〉

농가 처리부담 경감…무허가 축사 합리적 해법 찾기 선결과제

〉〉지정토론

▲좌장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축산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무허가 축사문제와 가축분뇨 자원화, 도축장 선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는 환경문제와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과제다. 오늘 좋은 의견이 제시돼 법률

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오늘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많은 양돈인이 해양투기 근절은 무리라고 했지만, 근절 중이다. 정승헌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전국의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정화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총 질소(T-N)를 기존 850ppm에서 250ppm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설에서 축산농가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준이다. 400ppm 정도가 적당하다.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관거로 유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활하수 채집관거에 직접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등 FTA시대 양돈농가가 살 수 있는 축산분뇨처리대책을 만들어 달라.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근본적으로 무허가 축사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분뇨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범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치 이후 가축분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허가 축사에는 분뇨처리시설을 만들 수 없다.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지역민원 탓에 위탁처리장도 만들기 어렵다. 선행조건 없이 축산농가만 범법자로 만들어선 곤란하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회생방안 마련과 축사이전 명령 때는 10년의 유예기간,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부지확보 등 정당한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가축분뇨법에 부합되지 않는 농가의 폐업보상비 현실화도 절실하다.

▲이철호 조합장(파주연천축협)=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팔당상수원을 축산농가가 오염시키는지 묻고 싶다. 그 많은 숙박시설과 요식업소가 오염시키는 것은 아닌가. 가축분뇨의 88%가 퇴액비로 자원화 되고 12%가 정화 방류되고 있다.

우리는 억울하다. 대책추진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규제하면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식량산업 말살인 셈이다. 가축분뇨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이 환경부는 폐기물이고, 우리는 자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자원화 할 수 있는 길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면 안 된다. 이런 정책을 볼 때마다 공직자들도 정책실명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이제만 조합장(대충양돈조합)=환경부가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내놓았는데, 법률에서 이 정도 강력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에선 얼마나 규제가 심해질지 우려된다. 축산법상 배출시설은 처리시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축산을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해 과징금을 3억 원이나 물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인가.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을 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합원 중에서 배출허가농장의 수질을 172건 분석해보니 질소농도가 850ppm이 나온다. 250ppm수준으로 강화는 현실성이 없다. 500~600ppm으로 해야 농가가 맞출 수 있다.

▲어성욱 교수(우송대)=BOD는 기존시설로 어렵지 않은데 질소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장에서도 쉽게 못하는 것이다. 시설문제가 아니라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돈농가에 가보면 인력이 모자란다. 모두 처리비용이 들더라도 누가 다 가져갔으면 한다. 개별농가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결국 전문가가 할 수 있게 생산자단체에서 인력을 육성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좋다. 공공처리장이 없는 지역은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인분뇨처리장 200여개소를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방류수 수질기준 현실에 맞게…처리시설 관리 전문인력 필요
규제일변 독소조항 폐지는 축산도 환경도 살리는 길
등록한 무허가 축사 배출 인정…협동조합 위탁 처리방안도 강구

▲김용석 과장(국립환경과학원)=가축분뇨는 자원이다. 처리 잘하면 인근 과수원에서 바로 비료로 쓸 수 있다. 문제는 자원화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것과 비가림도 없는 시설의 경우 비가 오면 공공수역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다.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축산도,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분뇨처리는 논산축협처럼, 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자 부회장(전국한우협회)=이번 입법예고안은 축산농가의 목을 죄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살 수 있는 농가가 없다. 농가도 환경도 사는 정책이 절실하다. 예산 쓸 때 제대로 검토하고 투자해 환경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공장폐수는 재활용이 안 된다. 환경부에서 축산분뇨를 폐수라고 하는데 화가 난다. 100% 재활용 가능한 값진 자원이다. 문건이든, 공사석에서든 폐수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 4대강 하천부지에 조사료 재배도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허용하고 환경부가 규제한다고 한다. 왜 수질이 오염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재고해야 한다. 화학비료를 못 쓰게 하면 가축분뇨 자원화는 100% 해결 가능하다. 규제보다, 자원화 촉진 정책을 펴 달라.

▲정정우 부회장(한국오리협회)=하나의 국가, 같은 정부에서 농식품부와 환경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 없이 왜 일방적으로 이런 개정안이 먼저 발표돼 언론에 나오는지 분노한다. FTA로 고사지경인 농가보고 죽으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책상머리서 무엇을 했나. 농식품부는 이런 대책이 나올 때 까지 무엇을 했는가. 환경부 대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규제강화로 축산농가만 죽이지 말고, 가축분뇨 자원화, 정화처리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가축분뇨는 분명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은 정부가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농가들은 이 대책을 축산하지 말라는 것으로 본다. 대안도 없이 법으로 농가를 다스리겠다는 의도다. 무허가 배출시설을 환경부 잣대로 폐쇄명령까지 내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건축법을 무시하고 환경부 독단으로 하는 것은 문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까지 법률에 담은 것은 환경부의 규제의지만 확인시킨 것이다.

한국축산업의 적정기반 유지를 위해 환경부 독단보다 농정당국과 농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행정처분 강화 보다 1992년처럼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업 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허가 및 신청이 가능토록 해줘야 한다. 등록제 도입당시 무허가를 양성화 못해주는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으로 등록 조치했던 사례를 잊지 말아

야 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근거인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법률해석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행정조치, 사육제한구역 확대, 의무 준공검사 등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사육중단 및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독소조항이다.
질소 등 방류수 수질기준도 현행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인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준다. 모든 역량을 모아 막아낼 수밖에 없다.
▲권우순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의 가장 큰 핵심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이다. 작년에 정부입법으로 12월에 허가제가 포함된 축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2월 공포됐다. 허가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내년에는 8천600농가가 허가제 대상이다. 2014년에는 전업농가, 2015년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등록제 기준에 들어와 있는 모든 농가들이 대상이다. 소, 돼지는 98% 이상, 닭은 90% 이상이 허가대상에서 사육된다. 허가기준에는 차단방역, 소독 외에도, 분뇨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올해 안에 세부기준이 만들어진다. 환경부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얘기하는데, 농식품부에서 볼 때 신규진입농가는 타 법령의 기준을 적법하게 지켜야 하겠지만, 기존농가는 무허가라도 허가제 기준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의무점검 기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걱정하는 분뇨문제는 없어지도록 농식품부에서 충분히 할 것이다. 허가제에서 충분히 미신고 시설도 커버될 것이다.
▲이종광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가축분뇨법은 환경부만의 법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와 협의해 환경부와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이런 과정까지 왔다. 총론적으로는 선진화 대책이 환경부나 농식품부나 맞다. 그러나 축산농가 현실을 볼 때는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도 있고, 어떤 경우는 환경부에서 고민해야 하는 내용도 많다. 또 축산농가의 책무가 뒤따르는 것도 있다. 계속 협의해보겠다.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이 됐다. 가축분뇨처리는 경제사업개념 보다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농가가 가축을 사육하는데 분뇨처리 고민이 없도록 해결해주는 역할을 축협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형률 사무관(환경부 물환경정책과)=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 예산이 현재 5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 하수처리장(하수관거)에 들어가는 것이 2조5천억원 정도다. 이게 거의 끝나간다.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한 예산에 올해 1천억원, 내년 2천억원 정도 확보하면 공공처리 실현도 가능하다. 방류수 기준은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계속 들을 것이다. 무허가 문제는 우리로서도 물러설 곳이 없다. 다만 건폐율은 축산법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다시 고민해보겠다.

〉〉청중토론

축산, 환경오염 주범 인식 잘못…농가 액비 기술적 처리 고충 해소
무분별 업체허가로 농장 분뇨처리시설 애물단지 전락…대책 시급

▲오흥일씨(경기 양평 육계농가)=축산을 한다고 왜 범죄자라고 느껴야 하나. 환경부에서 4대강 수질이 나빠지면 다른 요인도 많을 것인데, 왜 질소

와 인 수치가 올라간 원인으로 축산만이 지목받는지 의문이다.

▲서정윤 지부장(한우협회 양평지부장)=축산폐수와 가축분뇨 조차 구분 못하나. 축산에서 폐수는 축사바닥을 씻어낸 것이다. 가축분뇨는 자원이다. 모든 것을 가축분뇨가 오염시킨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폐가축이 나오면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신조씨(동의농장/경북 예천 한돈농가)=농가에서 기술적으로 액비처리하기 힘들다. 가축관리하기도 바쁘다. 농지에 충분히 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학비료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는 것을 수자원개발공사 등에서 고민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퇴액비의 막힌 유통흐름을 풀어 달라.

▲김재경 지부장(한돈협회 용인지부장)=우리가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말해선 안 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정책을 잘못한 것이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정부가 지으라고 해서 설치한 분뇨처리장이 전국에서 다 썩고 있다. 정부에서 제대로 된 업체에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아무나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만든 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농가부담만 키워왔다.

가축분뇨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정부가 제시해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하는 것인가. 농가보고 분뇨처리 잘하라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육성하라.

농식품부, 닭 · 오리고기 수출전략품목 지정

농림수산식품부가 기존 식품전략품목 25개와 함께 백합, 국화, 닭고기, 오리고기 등 신규 전략품목 4종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신규품목 지정과 함께 농식품 수를 물류비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확대 보완대책'을 6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세계 경기침체와 일본산 농식품 대체효과 약화 등으로 올해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하반기 농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올해 1~4월 농식품 수출은 23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기 6.6% 증가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전략품목은 표준물류비 지원이 기존 8%에서 10%로 늘어나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현행 수출물류비 지원제외 품목요건을 품목별 연간 수출실적 20만불을 5만불로 하향조정해 8%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회요인을 활용해 H-Mart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 특별 판촉을 개최하고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와 마카오 로열 슈퍼마켓 등 중국시장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박지훈 기자 lionking@fnnews.com 2012.06.03

축산농가 "방역시설 등 농장현실 반영을"

정부, 축산업허가제 세부기준 마련…이달 중 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 계획

정부가 축산업허가제 세부 기준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방역시설 기준 등을 농장 현실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각 축종별로 축산업 허가제 관련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으로 축산업허가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축산업 허가제는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이 확대 될 예정. 허가제 대상이 되면 축산농가들은 기준에 맞는 방역 및 소독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축산업 등록제는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소의 경우 100두 이상)의 사육농가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1년의 유예기간(2014년 2월까지) 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소의 경우 1만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마련된 허가기준안을 보면 소독시설의 경우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소독을 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과 함께 차량진입바를 설치하고, 대인소독이 가능한 분무용 소독시설과 축사 출입자를 위한 방역물품 등을 비치해야 한다.

또한 방역을 위해 농장 주변에 울타리 시설을 갖추고 농장입구에는 물품반입 창고를 설치해야 한다.

축사의 경우 음용수 기준의 식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급수시설을 갖춰야 하며 분뇨 비가림 시설과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축사 및 퇴비사에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축산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축산환경, 질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데, 신규농가의 경우 20시간(3일), 허가대상농가는 10시간(2일), 등록대상농가는 6시간(1일)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이 같은 허가 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취소 및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축산농가 반응은=새롭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장 축산농가들은 축산업 허가제 세부기준안 마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세부기준에 맞게 축사 시설을 정비하려면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의 지원 폭을 확대하고, 농장 현실에 맞게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축산농가들의 주문.

축산농가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차량소독 시설의 경우 고정식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오히려 소독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 이동식 분무기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또 허가제 대상 농가의 경우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법 등의 규제로 추가 창고 건설이 어렵다는 의견. 특히 매일 사료가 들어오는데 이를 일일이 창고로 옮겨 소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무허가 축사 문제도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재점화 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허가제를 도입

할 경우 혼란만 야기할 수 있어 허가제 도입과 함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축산농가들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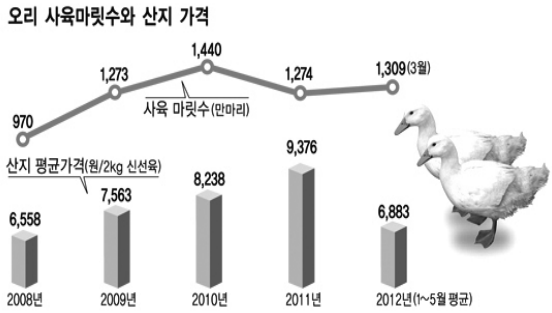
무엇보다 축산농가들은 사료값 급등 등 농장 경영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만큼 축산업 허가제를 통한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농가 지원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허가제 대상이 되면 세부기준에 맞는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 예를 들어 격리돈사를 새로 설치하기보다 기존 축사에 칸막이로 격리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등이 있다.

이밖에도 축산물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농가의 경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과 중복되는 면이 있는 만큼 관련 항목을 면제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앞으로 허가 받은 농가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게 되면 농장 매매 및 양도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2012.06.04

산지 오리가격 40%나 추락 … 동네 음식점 값은 요지부동
마릿수 많아 값전망 어두워 … 오리업계 자율감축 고심중 … 음식점도 소비촉진 동참을



2일, 서울 도봉구의 한 오리전문음식점. 주말을 맞아 가족단위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차림표를 훑어보는 고객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비싼 가격 탓이다. 이 음식점이 구이와 훈제 등을 혼합해 개발 · 판매하고 있는 '오리한상' 값은 6만원. 4년 전 개업할 때 책정한 값을 그대로 받고 있다.

식당에서 만난 김모씨는 "오리에 불포화지방산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자주 이용하고 싶지만 너무 비싼 값에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라며 "산지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식당에서의 가격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지 오리가격의 폭락세가 장기화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 음식점의 소비자 가격은 거의 떨어지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2kg짜리 오리 신선육 산지가격은 5,900원이다.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값과 견줘서는 40%나 값이 떨어졌다.

오리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쇠고기

와 돼지고기 대체재로 오리고기가 인기를 끌면서 입식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올 들어 쇠고기와 돼지고기 생산량이 회복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오리고기 산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오리 사육마릿수는 1,309만마리로 전년 대비 52.8%나 증가했고, 4월 병아리 입식 마릿수도 749만마리로 전년 대비 14.9%나 늘어 하반기 출하 마릿수도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6~8월 산지가격 전망도 여름철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및 재고량 과다로 전년 대비 33~40%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산지 오리가격 전망이 이처럼 불투명함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자율감축과 소비확대 방안 마련 등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산지값이 폭락해 계열업체별로 생산량을 20%가량 자율 감축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며 "문제는 하반기에도 입식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불투명해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비지에서도 값을 내려 오리소비 확대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은 "자체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오리고기 소비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로 높은 가격을 꼽았다"며 "산지가격이 내려간 만큼 소비지 식당 등에서도 가격을 낮춰 소비 확대에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고 털어놨다.

농민신문 성홍기 기자 hgsung@nongmin.com 2012.6.8

축산 · 환경 조화 꿈꾸는 전남축산의 허브 지역축산, 우리가 이끈다 〈나주시〉

한우 비롯 전 축종 사육두수 전남 최고…유통시설도 집중

나주시는 전라남도에서 축산업이 가장 발달된 곳 중 하나다. 나주는 특히 농협축산물공판장을 비롯해 2개 도축장과 4개의 오리도압장, 남양유업 나주공장, 녹색계란유통센터 등 축산물 유통의 허브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한우를 비롯해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두수가 전남 지역 최고이며 오리의 경우 전국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오리사육 비중 전국 20%…최고 주산지
도압장만 4곳 · 도축장 등 유통시설 집약
친환경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박차

◆ 나주시 축산현황
735호로 이중 한우농가가 2천165호가 가장 많다. 한우 사육두수는 4만2천954두이며 젖소는 98농가에서 8천322두가 사육되고 있다.
돼지는 137농가에서 17만2천555두, 닭은 196농가에서 555만2천220수가 사육되고 있다. 특히

■ 나주시 가축사육현황 (2011년 하반기 기준)

한우	가구수	2,165
	마리수	42,954
돼지	가구수	137
	마리수	172,555
젖소	가구수	98
	마리수	8,322
닭	가구수	196
	마리수	5,552,220
오리	가구수	139
	마리수	2,076,999

■ 나주시 축산관련 업체 현황

명칭	품목	처리능력(1일)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소,돼지	소 100두, 돼지 1,200두
중앙축산	소,돼지	소 100두, 돼지 800두
화인코리아	닭,오리	닭 64,000수, 오리 32,000수
정다운	오리	오리 20,000수
코리아팜도	오리	오리 30,000수
신촌지연오리	오리	오리 16,000수
남양유업	우유	원유 125톤
녹색계란	계란	

오리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9농가가 있으며 이들 농가에서 전국의 오리사육수수의 20%에 육박하는 207만6천999수가 사육되고 있다.
이 같은 가축 사육두수는 전남지역에서 한우는 9%, 돼지 20%, 낙농 20%, 닭 30%, 오리 5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나주의 축산업이 전남의 중심에 있다보니 도축장이나 관련기업들도 나주에서 집중돼 있다.
우선 나주에는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을 비롯해 중앙축산 등 2개의 도축장이 자리잡고 있다.

나주공판장의 경우 일일 소 100두, 돼지 1천200두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축산은 소 100두, 돼지 800두를 처리할 수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의 나주공장이 자리잡고 있어 하루에 원유 125톤의 가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사육농가들의 출자로 설립된 녹색계란 주식회사는 전남 계란유통 메카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최고의 오리 산지답게 오리도압장만 4개가 몰려있다. 국내 오리고기의 대표 브랜드인 화인코리아를 비롯해, 나주 동수농공단지에 정다운, 코리아팔도, 신촌자연오리 등 3개소가 있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만 14개소가 있어 현장 전문 수의사만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 나주시 축산시책 현황
다른 어느 지역보다 축산업이 발달돼 있어 나주시 축산과의 사업규모도 만만치 않다.
우선 축산과에는 축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축산행정팀을 비롯해 축산방역팀, 축산기술팀 등 3개팀으로 구성돼 13여명이 축산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주시의 축산관련 금년도 예산은 총 198억8천890만원에 달한다.

이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빼고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관련시책만 10여개가 넘는다.
우선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 4억원, 송아지설사병 예방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3천360만원, 감보로 백신 지원사업 9천만원, 축사입구 소독시설 지원사업 9천800만원, 유용미생물 활용 지원사업 9천만원, 젖소농가 발정탐지기 지원사업 6천3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조사료 자급률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2천400ha에 청보리를 파종해 총 4만8천톤의 조사료를 수확했으며 올해는 이를 2천900ha까지 확대해 한우, 젖소 농가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값비싼 조사료 장비 구매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30%인 보조비율을 5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농가들도 손쉽게 청보리 곤포사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료유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료유통센터는 청보리 곤포사일리지의 물류기

지로 600kg단위의 곤포사일리지를 소포장 단위로 세분 포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농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산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영산강 인근에 조사료 재배 단지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우려해 조사료 재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년초 위주의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과 축산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 밖에도 시에서 직접 미생물을 배양해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 지도자가 말하는 나주축산의 현안

타축종 대비 열악한 시설…지자체 등 관심 절실

■ 김동호 지부장 (오리협회)
오리는 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발달해 축사시설 등이 다른 축종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나주는 오리산업의 중심지로 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지자체, 관련 업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Lhyoung@chuksannews.co.kr 2012.06.11

올 여름 보양식 '오리가 대세' 가격 하락에 소비 급증 장어 · 생닭은 '주춤'

최근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리'가 보양식 상품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가 5월부터 지난 6월 14일까지 대표적인 보양식 상품의 판매 동향을 살펴본 결과 오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5.6%, 전복은 20.5% 상승한 반면 장어는 14.5%, 생닭은 7.5% 감소했다.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나타낸 오리는 훈제 오리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리 매출이 상승한 이유는 오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
롯데마트에서는 현재 냉장 통오리(1.2kg · 1마리) 가격이 9천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천800원보다 23% 가량 하락했다.
오리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오리 사육 마리수는 1천309만마리로 전년보다 52.8%나 증가했다.
4월 병아리 입식 마리수도 749만마리로 전년보다 14.9% 늘어 하반기 출하량이 꾸준히 늘 것으로 예측됐다.
또 7~8월 산지가격도 여름철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및 재고량 과다로 전년 대비 33~40% 떨어질 것으로 관측돼 오리 수요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전복은 1kg(15마리 · 1박스) 기준으로 지난해 5~6월까지 가격이 3만8천원에 형성됐으나 올해는 평균 가격이 3만3천원으로 13% 가량 하락했다.
지난해 여름 태풍 피해로 인해 전복 가두리 양식

장의 30%가 유실돼 전복 공급이 줄자 가격이 급등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 5월부터는 작은 크기의 전복 출하량이 다소 늘어나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전복 가격 하락세는 수요 감소로 인한 영향이 커 단기적인 것일 뿐 수요가 증가하는 7~8월 성수기에는 지난해보다 20~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어와 생닭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요가 주춤하고 있다.
특히 장어는 보양식 상품 중 가격 상승이 가장 높았다. 국내산 장어의 경우 치어 입식량이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훈제 민물장어 도매가격의 경우 1kg당 8만5천원에 육박하면서 2년전 3만원대 수준이었던 것보다 두 배 넘게 올랐다.

생닭은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상승해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 롯데마트에서는 백숙용 생닭(1.1kg · 1마리) 가격이 지난해 7천500원에서 올해 7천900원으로 상승했다. 삼계탕용 생닭(500g)도 지난해 3천600원에서 올해 3천800원으로 올랐다.
남창희 롯데마트 마케팅부문장은 "가격 동향에 따라 초여름 보양식 매출도 품목별로 희비가 교차했다"며 "본격적으로 보양식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훈제오리, 생닭 등을 상반기 최저가 수준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북신문 성민규기자 smg@kyongbuk.co.kr 2012.06.18

〈한국오리협회〉 안희복 고문 오리업계 불황, 자조금 동참만이 난관 극복의 길

오리업계는 지금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어느 산업이든 호황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황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오리업계가 똘똘 뭉쳐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이다.
하지만 최근 불황으로 인해 자조금 거출이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어려울수록 소비촉진을 위한 정면돌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조금이 사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어렵지만 십시일반으로 자조금 거출에 적극 동참할때 난관을 극복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물량 경쟁보다는 새로운 제품개발 등을 통해 오리고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할 시기이다.

축산신문 한국오리협회 안희복 고문(청산식품 대표) 2012.06.20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중점 뉴스와 초점/ 농식품부 내년 사업 방향은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에도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한 지역단위 축산단지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계열화 정도가 떨어지는 한우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 · 친환경 · 유통 개선…FTA 대비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내년도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주요 사업은 ▲가축질병 방역사업 확대 · 강화 ▲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 축산업 활성화 ▲FTA 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및 축산업 성장동력 확충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토록 하고,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가축질병방역 사업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축산농장의 효율적인 방역 및 축산업허가제 도입에 따른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위험하고 해로운 축산물의 신속한 회수 등을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의약품 남용 방지 등을 위해서는 수의사 처방제를 지원키로 했다.

경종 ·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업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며,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한 지역단위 축산단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가축개량 체계개선을 통한 우수 종축 공급 확대를 위해 가축개량 사업의 지원과 조사료 생산 확대 등 사료가격 안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유가격 안정을 위해 유제품 수급체계 개선 등 낙농지원도 확대하고, 계열화 정도가 떨어지는 한우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지 대규모 유통업체와 협력 또는 경쟁할 수 있는 규모화 · 조직화된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육성과 축사 신축 · 개보수, 자동화 · 방역시설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축장 구조조정 및 지역별 거점 도축장을 육성 지원하고, 우량송아지 공급시장 활성화도 유도키로 했다.

경마위주의 말 산업체계를 승마, 재활치료, 생활스포츠로의 개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을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축산신문 김영란 ysfeed@hanmail.net 2012.06.20

“중국과 FTA, 반드시 막을 것” ‘한 · 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 출범

농수축산연합회와 한국농민연대가 주축이 된 ‘한 · 중FTA중단 비상대책위원회’가 6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농어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농수축산단체를 중심으로 범농어업계가 한 · 중 FTA 저지를 위한 대규모 투쟁에 나선다. 농수축산연합회 · 한국농민연대 소속 40여개의 농수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은 지난 6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 · 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식을 갖고 한 · 중 FTA 추진 중단을 단호하게 요구했다. 비대위 공동대표에는 김준봉 농수축산연합회 상임대표와 이준동 한국농민연대 상임대표가 추대됐다.

앞으로 비대위는 대국민 선전과 함께 한 · 중 FTA 중단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한 · 중 FTA 관련 토론회 개최, 한 · 중 FTA 협상 중단 결의안 추진, 19대 국회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등 한 · 중 FTA 중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비대위는 7월 3일에 예정된 한 · 중 FTA 2차 협상에 맞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7월 4~6일에는 단체별로 가능한 인원을 동원해 협상장인 제주도에서 제주도 농어민단체들과 함께 원정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준봉 공동대표는 “한 · 중 FTA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와 함께 하는 저지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경고했고 이준동 공동대표는 “한 · 중 FTA 저지에 결사항전의 의지로 나설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농어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출범선언문에서 “400만 농어민과 범농어업계 단체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한 · 중 FTA 중단에 대한 단결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비대위를 발족한다”며 “농수축산업이 포함된 모든 종류의 FTA 추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농어업 붕괴와 국내 산업 전반의 피해를 불러올 한 · 중 FTA 협상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비대위는 한 · 중 FTA를 반대하는 모든 정당 · 시민사회단체들과 굳게 연대할 것이며 전 국민과 함께 한 · 중 FTA 중단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한편 한 · 중 FTA 2차 협상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분과위 구성, 향후 협상 논의방향 등에 대해 양국간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2차 협상에서 무엇을 논의할 지는 양국이 만나봐야 알 수 있다”면서 “분과위가 구성돼야 향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분과위 구성과 향후 논의 방향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돌려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
조영규 기자(choyk@agrinet.co.kr) 2012.06.21

FTA 수혜산업, 농축산업 지원 입법화 홍문표 의원, 이익 일부 손실보전 위한 재원 활용…'특별법 개정안' 입법발의

축발기금 규모 · 운용기간도 확대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실을 보는 농수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화가 추진된다.
홍문표 의원(새누리, 충남 예산 · 홍성)은 19대 국회 들어 첫 번째로 지난 6월 13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4.11 총선 당시 공약을 입법화 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한 · 미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업의 피해가 향후 15년간 12조원 이상에 달하고, 이 가운데 축산업의 피해가 7조원을 넘어서는 등 농수축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실을 보는 농수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의 기금운용 취지 및 기간과 규모도 한 · 미FTA 체결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FTA 이행으로 인한 산업별 순이익 및 순손실을 조사 분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이익을 본 산업들로 하여금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FTA기금 및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농어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홍 의원은 "FTA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FTA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된다"며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동반성장, 상생정신, 상호부조의 차원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농수축산업을 위해 부담금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난 해 말 여야정 13개 합의안이 한 · 미FTA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대책으로 입법화 되었고, 장기적으로 24조여원의 재정지원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포괄적인 조치로서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며 피해보전에 대한 효과도 농어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 미FTA 발효 이후 3월~5월의 수출액은 총 51억불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1억불 이상의 수출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일부 특정 산업군이 농수축산업에 비해 한미FTA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ysfeed@hanmail.net 2012.06.20

가축분뇨법령 개정안 번복 절대 불가

축산업계의 환경부 가축분뇨법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개정안 번복은 절대

불가하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두고 축산업계와 환경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윤종수 환경부 차관에게 '축산농가 생존권 박탈, 가축분뇨법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건의'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축산인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환경부의 가축분뇨 종합대책 발표로 전국 축산농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으며, 축산농가를 4대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현 처사에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 문제는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초지법, 하천법 등 6개 부처 10개 법률이 얽혀있는 난맥상의 문제로 전업화 · 규모화라는 농정지표가 낳은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이러한 편향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축산농가의 절반이상이 축산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환경부측에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에 대해 △무허가,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방류수수질기준 현행 유지 및 단계적 실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재고 △퇴액비의 검사방법 등 기준 마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 지역농협 전환 대책 마련 △가축분뇨 생

활하수 채집관거 직접연결 방안마련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에 윤 차관은 "가축분뇨법 개정안 번복은 불가하며 축산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축산도 변해야 할 때"라며 기존 환경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측은 환경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만큼 향후 대정부 및 국회 농정활동 등을 통해 대응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여론조성을 위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필두로 6월 27일로 환경부 공청회 무산 활동에 나선 한편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각 정당 국회의원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집회 등 강경대응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안희경 기자 2012.06.25

> "무허가 축사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터"
> 서 장관, 전국축협조합장대회서 특강 통해 밝혀

축산업계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 법안의 무허가,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신설과 관련해 업계가 무허가 시설의 양성화 등 특별조치를 건의해온 가운데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열린 '판매농협 구현을 위한 전국 축협 조합장 전진대회'에 참석한 서규용 장관은 "현재 오리의 경우 무허가 축사가 56%에 달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양성화 조치로 묵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축종별 건축기준을 조사해,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고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 허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1992년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축종별로 정확한 건축법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서 벗어난 부문은 (국토부에)건축법 개정 요구 등을 통해 근본 해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4대강 유역에 조사료 재배를 허용해 달라는 이날 현장 건의 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조사료 경작의 필요성과 명분을 명확히 전달, 이해를 구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정책 특강을 통해 저능력 암소 도태 사업의 적극적인 독려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판매사업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판매역량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원조합 지도지원 개정을 통해 중앙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105개소의 도시 농 · 축협 기금 출연으로 상생자금 5000억 원을 조성, 산지조합의 농축산물을 도시조합이 판매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면서 "이제까지 경영이 어려운 조합을 대상으로 한 중앙회 지원 방식에서 탈피, 도시조합의 판매사업 부문 활성화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조합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며 판매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합 이사 및 대의원들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조합장 선거와 지지 기반 등을 둘러싸고 조합의 의결기구가 조합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오랜 병폐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조합사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변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최 회장은 중앙회 차원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20~21일 양일간 진행된 전국 축협 조합장 전진대회에서 조합장들은 '판매농협' 구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해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 판매 달성과 함께 도농간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균형 발전에 적극 협력키로 다짐했다.

조합장들은 또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해 △무허가 ·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특별조치를 비롯 △방류수 수질기준의 단계적 실시 △가축사육제한구역대상지역의 추가 확대 불가 △농협 설치 운영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 △가축

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반입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철을 위한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축산경제신문 옥미영 기자 2012.06.21

[사람 속으로] 미국 최고 암병원 MD앤더슨 종신교수 김의신
담배보다 나쁜 게 동물성 기름 … 나이 들수록 삼겹살은 피하라

암환자에게 오리고기 권해

미국 대표적인 암 전문 병원 MD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인 김의신 박사는 "동물성 기름을 섭취하면 서양인은 피하지방이 되고 동양인은 내장지방으로 쌓인다. 그러니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어라.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먹었던 보리밥 · 된장 · 고추장 등이 돌이켜보면 모두 건강식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텍사스대학교의 MD앤더슨 암센터다. 연간 연구비용만 6000억원이 넘는다. 단일 연구기관으로선 암 연구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암 연구비의 15%는 기부금으로 채워진다. 세상이 MD앤더슨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 MD앤더슨이 암 연구의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종신교수가 된 한국인이 있다. 김의신(71) 박사다. 그는 1991년과 94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최고의 의사(The Best Doctors in America)'에 뽑히기도 했다. 연간 MD앤더슨을 찾는 한국인 암환자는 약 600명이다. 그중에는 대기업의 오너들도 있다. 김 박사는 "9 · 11 이전만 해도 외국에서 오는 환자가 3분의 1이었다. 중동의 왕족들도 많이 왔다. 9 · 11 이후에는 미국 입국이 어려워져 이들의 발걸음이 확 줄었다"고 말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재력 있는 암환자들이 찾아가는 곳이 MD앤더슨이다.

김 박사는 세계적인 핵의학 전문가다. 의료 선진국에서 한국인 의사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이유로 국민훈장 동백장도 두 번이나 받았다. 그런 김 박사가 18일 인천의 가천 길병원을 찾았다. 암센터 11층 가천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암 이야기' 강연을 했다. 청중석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병원복을 입은 환자들, 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이들이 앉아 있었다. 김 박사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암 연구를 하며 꿰뚫은 '암에 대한 통찰'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때로는 직설적이었고, 때로는 유머가 넘쳤다. 강연을 마친 그와 마주 앉았다.

김의신 박사가 종신교수로 있는 MD앤더슨 암센터.

"담배보다 몸에 나

쁜 것이 동물성 기름이다. 피자나 핫도그 등 기름에 튀긴 음식, 지방이 많은 삼겹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청중의 눈이 동그래졌다. 삼겹살은 한국인에게 친근한 음식이다. 그런데 피하라니.

●주장이 과격하게 들린다. 왜 삼겹살을 피하라고 하나.

"미국에선 그런 음식이 베이컨이다. 젊을 때는 괜찮다. 20대에는 동물성 기름을 먹어도 분해 효소가 왕성하게 분비돼 문제가 없다. 그런데 40대가 넘어서면 달라진다. 동물성 기름을 소화하는 효소가 적게 나온다. 그래서 기름이 몸 안에 쌓이게 된다. 서양인들이 동물성 기름을 먹으면 피부 아래 지방이 쌓이는 피하지방이 된다. 그래서 뚱뚱해진다. 동양인은 다르다."

●동양인은 어떻게 다른가.

"동양인은 겉모습이 그다지 뚱뚱해지진 않는다. 대신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내장에 기름이 찬다. 내장지방이 된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뚱뚱하지 않으니까 먹어도 되겠지'라고 다들 생각한다. 그건 큰 착오다."

●왜 착오인가.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혈관벽에 기름이 찬다. 그런데 그게 들러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진다. 그리고 몸 안을 돌다가 조그만 모세혈관에 가서 달라붙는다. 뇌에 가서 들러붙으면 중풍이 오고, 치매가 온다. 간에 기름이 끼면 지방간이 되고, 간암이 된다. 췌장에 기름기가 차면 당뇨병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

"40대가 넘어가면 몸에서 분해 효소도 적게 나오고, 인슐린도 적게 나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 소식(小食)해야 한다. 삼겹살도 양을 줄여야 한다. 몸은 40대인데 20대 때 먹던 습관대로 먹으면 곤란하다. 나도 예전에는 배가 아플 만큼 많이 먹었다. 이젠 식사량을 줄였다."

김 박사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혈관성 병"이라고 했다. "나쁜 암은 진단 후 1년 안에 사망한다. 거기서 끝이다. 그런데 치매나 중풍 같은 혈관성 병은 10~20년씩 투병하며 가족을 힘들게 한다." 혈관성 병을 예방하다 보면 암 예방도 된다는 지적이었다.

김 박사는 '암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꼬집기 시작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환자가 한국인이다. 그들은 암으로 죽기 전에 굶어서 죽는다. 치료를 견디지 못해서 죽는다"고 말했다.

●굶어 죽는다니. 무슨 뜻인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잘 먹어야 한다. 고기도 먹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암환자에게 고기를 못 먹게 한다고 들었다. 항암 치료는 독하다. 일종의 독약을 먹는 셈이다. 그게 몸에 손상을 많이 준다. 우리 몸의 단백질을 파괴한다.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 단백질이 가장 많은 게 고기다."

●암 진단 후의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쉽게 말해 방사선 치료는 우리 몸을 확 구워버리는 거다. 불고기 굽는 것과 똑같다. 기운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때 고기를 먹으면서 기운을 차려야 치료를 견딜 수가 있다. 그런데 채식

만 하거나 잘 먹지 못하면 체중이 빠진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면 절대 체중이 빠져선 안 된다. 입맛이 없고 체중이 떨어지면 항암 치료제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암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치료를 견디지 못해 죽게 된다."

●어떤 고기가 좋은가.

"나는 개고기나 **오리고기**를 권한다. 동물성 기름이 적거나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그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물을 많이 마시라"고 주문했다. 독한 약을 먹는 만큼 물을 많이 마셔야 속에서 희석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암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인과 미국인은 아주 다르다고 했다. MD앤더슨에는 한국의 재력가도 꽤 온다. 김 박사는 "한국인 암환자들이 의사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다. 미국인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암 환자에게 권하는 오리고기와 현미 잡곡밥.

중앙일보 박종근 기자 2012.06.23

자조금 지원 축소…
'15년 일몰제 적용
농식품부, 예산 제도개선…축산인 "해도 너무해" 반발

내년 축산자조금에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오는 2015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연례 ·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평가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이중 축산자조금사업과 브랜드판매시설지원사업, 쇠고기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산자조금사업의 경우 정부가 매년 지원해 오던 것을 오는 2015년까지 일몰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축산농민이 거출하는 금액만큼 정부가 동일한 규모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 오던 것을 일몰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축산자조금의 경우,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만들어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어 오고 있다.
이 자조금으로는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주로 하는데 축산물의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사업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자조금으로는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를 할 수 없게 해 축산인들의 원성이 자자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ysfeed@hanmail.net 2012.06.25

7월부터 오리고기 등급제 시행

오리고기가 내달부터 외관, 신선도 등에 따라 1+, 1, 2등급으로 구분돼 판매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오리고기 등급판정 사업을 한다고 지난 6월 26일 밝혔다.
등급판정을 받은 오리고기에는 품질등급과 판정일자가 표시되며, 판매처에 등급판정확인서가 제공된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식육포장처리업체 7개사를 대상으로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 평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부분육 생산 공정을 모니터링해 규격에 맞는 부분육 생산 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부분육 품질공정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부분육 포장에 품질공정 지정업체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 2012.06.26

오리 생산량 사상 첫 1천만수 넘어 지난달 도압수수 '1천33만9천791수'…가격 약세 여전

오리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1천만수를 넘어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에 따르면 5월 중 오리 도압수수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수를 넘어 1천33만9천791수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코리아더커드가 단일 회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수를 넘어 214만수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주원산오리가 111만수, 모란식품 99만9천수, 정다운이 97만7천수, 화인코리아 95만2천수의 오리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사의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생산량은 전월 대비 15.8%가 증가한 것이며 AI피해가 있었던 지난해보다는 무려 36.5%가 늘어났다.

이처럼 오리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리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6월 18일 현재 생체오리(3kg 기준)가격은 4천400원이며 신선육 가격도 5천00원대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43%, 35%가 하락한 상태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Lhyoung@chuksannews.co.kr 2012.06.25